

기본소득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1부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좌장

김세준 기본소득운동본부 상임대표

발표1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 경과, 현황 및 효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발표2

“국제 및 국내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논의 현황”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일시 2022년 04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중계 기본소득당 용혜인 유튜브

2부 2022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좌장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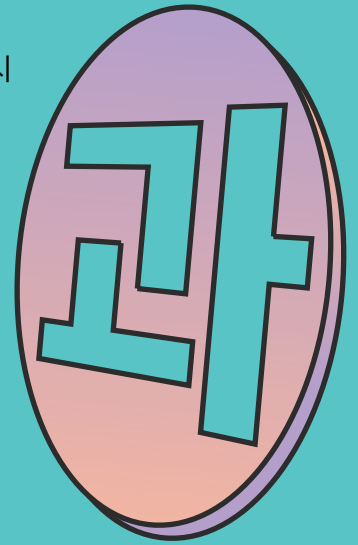
기조발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지방자치

공동주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미래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행사 순서

1부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좌장

김세준 기본소득운동본부 상임대표

발표1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 경과, 현황 및 효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발표2

“국제 및 국내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논의 현황”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2부 2022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좌장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기조발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축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입니다.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 주치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허영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함께 공동주최의 뜻을 모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시행 되고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시켜 지방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하게 될 새로운 지방정부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질 예정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국회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그간 재정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기본소득 정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주요 주체인 지방의회는 지역의 주요 산업, 인구 구성 등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민이 많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울 산 울주군·전라남도 해남의 어민 공익수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주체들의 노력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경기도의 주도로 48개의 지방정부가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고 해당 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안들이 공유되어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더욱 발전된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기초단체장의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정책화 의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국내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제도의 현황과 효과를 잘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2.0 시대에서 기본 소득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목표인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지방정부 관계자와 지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열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듯이,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지역민들의 요구로 전국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제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의 대표의원으로서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잘 추진될 있도록 지원하고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하고 행복한 봄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우원식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그리고 2기본권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기본사회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결의 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할 만큼 높이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늦춰졌지만, 대선기간에 기본사회의 아젠다를 만들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진전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정치를 창출한다”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입니다. 정치 없이 정책은 빛을 볼 수 없고, 정책 없이 정치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고 창의적 해법으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의 기본소득의 도입은 대부분 지방정부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그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선군의회의 ‘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조례’, 광주시 동구의회 ‘저소득주민생계지원조례’ 등 과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결국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또한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선도적인 정책 시행은 기본소득을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산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평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민의를 전당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지방자치」라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본소득당 옹혜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소병훈 의원님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좌장으로 함께해주신 김세준 기본소득운동본부 상임대표님과 발제와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전문 가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단계적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초기 철학적 이고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까지는 제도의 실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기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및 경제적 불평 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큼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비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지방정부에서 잘 자리 잡고 이것을 자양분 삼아 중앙정부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 정치의 동료들 찾아나선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소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직접 만나 대선 이후 기본소득 정치가 가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 중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신 이선호 울주군수님과 정선군민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계신 최승준 정선군수님과의 만남이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제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선군의 경우 자체적인 재원까지 마련하고 군민 동의도 얻었는데도 중앙정부가 명분없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두 지방정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지를 확대해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방정부 기본소득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에 더욱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논의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사회대전환의 열쇠로서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역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자체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기본소득의 효능감을 느끼는 시민들 역시 더욱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가 논의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공론화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남은 오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현방안을 접근하는 이번 논의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간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도입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방방곡곡 기본소득이 퍼져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준비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공동행동으로 함께하고 계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미래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소병훈, 우원식, 허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역시 재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님과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뛰어오셨던 두 분께서 이번 논의 역시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발제로 함께해주신 분들 역시 기본소득 정치의 동료로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분들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오는 지방선거를 기본소득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선거로 만들 어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부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발표1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 경과, 현황 및 효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 현황, 특성, 효과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유영성
ysyoo@gri.re.k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목 차

1. 경기도 기본소득 법제화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1 경기도 기본소득 법제화

1. 경기도 기본소득 법제화

| 경기도 차원의 기본소득 법제화 움직임

- 기본소득 관련 개별 조례들의 제정·운영

- 2018년부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공약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18.11.13
-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9.4.2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20.5.4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 '20.7.15 -> (5조)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시행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 '21.5.20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 '21.11.1
-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로 일원화 : '21.3.16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에 단서 조항 추가('21.8.10) -> 조례 간 모순 해결

1. 경기도 기본소득 법제화

| 경기도 차원의 기본소득 법제화 움직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5조》

- 제5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 ①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경기도 차원의 개별적인 기본소득 정책

- 대표적으로 크게 4~5가지 기본소득 정책 추진
 - 첫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2019년 4월부터 실시)
 - 둘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년부터 2회 실시)
 - 셋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급 (2021년 10월부터 실시)
 - 넷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2022년부터 추진 예정)
 - 다섯째, 경기 데이터 배당 (공공데이터 매각수익 배당) (20.2.20. 실시)
- 그밖에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 각종 행사 개최, 기본소득 추진 조직 결성, 경기도 내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기본소득 관련 콘텐츠 제작, 기본소득 관련 방송 실시, 공론화 조사 실시 등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첫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 실시

- 성격: 경기도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
- 사업 예산: 매년 계획에 따라 확보, 지속 추진 가능

- 지급대상 : 경기도 내 3년 이상(합산 10년) 거주 만 24세 청년
- 지급방법
 - 지급 기준일 및 지급 기간 : 매분기 시작 월 1일, 2019년~2022년까지 총 4년
 - 지급 내용 : 분기당 25만원, 년 100만원 지급
 -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
(사용지역)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 기간 : - 지급액 부담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7:3 비율로 부담
 - 소요 예산 : 1,519억원 ('21년)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 2020/2021년 >

시군명	사업건수	'20예산	'21예산	시군명	사업건수	'20예산	'21예산
합계	407건	64,523	115,644	김포시	10건	320	787
수원시	38건	2,057	2,201	광주시	7건	263.9	332.4
고양시	33건	12,546	17,596	광명시	7건	127	1,693
용인시	33건	8,082	8,150	군포시	25건	1,781	10,228
성남시	31건	4,120	25,713	하남시	1건	11.9	10.5
부천시	17건	1,159	1,567	오산시	26건	3,191	3,999
화성시	27건	4,705	22,816	양주시	4건	59	69.2
안산시	6건	4,815	4,530	구리시	2건	302.5	303.5
남양주시	12건	9,790	1,379	포천시	11건	485	960
안양시	38건	3,997	5,843	의왕시	8건	219	404
평택시	16건	2,134	1,978	양평군	6건	1,031	1,196
시흥시	9건	1,933	1,616	여주시	6건	380.8	316
파주시	10건	193	361	동두천시	9건	340	369
의정부시	10건	250	750	과천시	5건	230	476

GRI 경기연구원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청년기본소득 사업 업무 흐름 >



< 2019년 ~ 2020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대상자 (A)	신청자 (B)	지급자 (C)	신청률 (B/A)	대상자 (A)	신청자 (B)	지급자 (C)	신청률 (B/A)
평균	149,638	139,325	135,348	93.1%	150,622	138,239	135,750	91.8%

GRI 경기연구원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둘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 실시

- 성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지원책
- 실시 상태
 - (1차 재난기본소득) 2020년 4월 9일에 보편/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
 - (2차 재난기본소득) 2021년 2월에 1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

<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세부 내역 >

구분	대상	지급액 (총지급액)	지원제외	결제수단	신청 및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전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인당 10만원 (약 1조 3,263억원)	타 수당 중복수령 가능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 4월~7월 신청 • 3개월 한시 기간 • 8.31 일괄 사용 마감
시군 재난기본소득	시군민 전체	1인당 5~40만원 (약 1조 2,691억원)	중복수령 제외 시군별 상이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 3월~7월 신청 • 3개월 한시 기간 • 8.31 일괄 사용 마감

주1 : 안산(시민 10만원), 외국인(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자 7만원))

주2 : 남양주는 현금지급; 수원시는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로 전환

주3 :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3,405억원), 재해구호기금(2,737억원), 지역개발기금(7,500억원)을 내부 차용하여 재원조달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차)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



자료 : 오마이뉴스, 경기도 | 2020.05.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38018)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정책 비교 >

구분	중앙정부	경기도	
		소비지원금	재난기본소득(2차)
명칭	재난지원금(2차)	소비지원금	재난기본소득(2차)
집행일	2020. 9. 24.	2020. 9. 18 ~ 11. 17.	2021. 2. 1.
특성	선별/현금	보편/지역화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보편/지역화폐 및 신용·체크카드
대상 및 금액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 차등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선착순 기간 내 지역화폐 20만원 사용자, 3만원 할인	2021. 1. 19. (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기준일 당시 태어난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 (1인당 10만원)
예산	7조 8,000억원	1,000억원	1조 4035억원

자료 : 김정훈, 이다겸, 박원익(2020), 경기도 내부자료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셋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사업

● 농민기본소득 성격: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지원 정책

- 사업주체 : 경기도 내 시군
 - 준비된 시군부터 점진적으로 확산 추진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 시군 의회와도 협의되어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시행)
 - '21년 6개 시군 78천명 지급 ('22년 17개 시군 244천명 확대 예정)
- ※ ('21년~)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 ('22년)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지원금액 : 개인당 월 5만원(연 60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
- 지급방법 : 지역화폐
 -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매월 지급 원칙 (시군 사정에 따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분기별 지급도 검토)
- 농민참여 위원회 운영 (권장) : 지역농민기본소득위원회 운영 => 마을, 읍면동, 시군 위원회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소요예산 : 총 5년간 7,400억원(일반회계)

< 농민기본소득 추진 연도별 지급액 및 총사업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지급대상자(명)	234,667	244,700	244,700	244,700	244,700	244,700	1,458,167
지급액(천원/월)	50	50	50	50	50	50	50
지급월수	3	12	12	12	12	12	12
총사업비(억원)	352	1,560	1,560	1,560	1,560	1,560	8,152

※ '22년 부터는 31개 시군 시행을 전제로 예산 추정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 경기도 내 시군에 최근 3년 이상(합산 10년) 거주 농민
 - 주소지 시군에서 (시군 경계가 연접한 시군까지 포함) 농업인 규정을 충족하는 농지나 시설을 두고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유통, 가공 등은 제외) 종사
 - ※ 농산물 생산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미포함)
 -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미적용
- 지급대상 제외 조건
 - 법적 농업인이더라도 농업법인 등 사업체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노동자
 -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을 받고 있거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보충)

- 농민(법률상 농업인)에 제도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 등 가족농업인 포함
- 학생도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기본소득위원회에서 판단)
- 자녀가 부모를 도와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 자녀 중 실제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가능(기본소득위원회에서 판단)
- 묘목만 심은 임업인도 농업인에 포함 (가짜 임업인 판별을 위해 연 판매액 120만원 이상 기준)
- 외국인도 지급대상 조건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
- 장기요양 농민도 지급 (주요 농작물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할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일부 농작물 위탁은 가능)
- 농민기본소득 지급받으면 기초연금의 경우 인정소득에서 제외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지자체 현황 >



자료 : 유영성 외(2020).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넷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지급(시범사업)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 살리기에 주 목적을 둬
 - 농촌의 낮은 삶의 질, 높은 생활 물가 등으로 삶의 만족도 저하
 -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 탈촌 방지, 귀촌인 이탈 방지 중요 => 최소한의 수입 보장 필요
 - 실패한 농촌정책의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 시도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대상마을 모든 주민 대상)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2021. 11.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21.11.2)
 - 시범마을 공모(2021.11.12) 및 시범 면 선정(2021.12.28)
 - 효과분석 연구용역 착수 및 주민 사전조사 실시(2022.2.28~30일간)
 - '21년 사업비 38억원(시작), '22년 예산 63억원(확보), '25년 예산 113억원(예정)
- ※ 농민기본소득과의 차이
-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기반으로 지급
 - 농촌기본소득은 사람과 지역을 대상으로 함 (기본소득 원칙 충족 및 정의에 보다 부합)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범지역 선정

- 농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 법률상 농촌은 읍, 면 지역과 동 지역 등 농림지역이 해당
 - 법률상 농촌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하기에는 균형발전 도모라는 목적 달성 곤란
 - 면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
 - 농촌기본소득에서 농촌이란?
 - 지역소멸 지수 0.5이하인 소멸위험 면 지역 (※ 경기도 100개 면 중 88개 면이 소멸위험 지역)
 - 전국 면 평균 인구수('20.5월 기준 4,167명) 이하인 면 지역
- ※ [해당지역]
- 가평(1개면), 광주(2), 안성(3), 양평(2), 여주(3), 연천(8), 이천(1), 파주(1, 진동면 제외), 평택(1), 포천(3), 화성(1)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범지역 선정

-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평가를 통해 1개 면 선정
 - 시군으로부터 1개 면을 추천받아, 시군의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평가는 1차 서류 및 발표평가, 2차는 추첨방식으로 공정성 확보
- ※ [시범사업 대상]
- 연천군 청산면 확정('21.12.28)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방법

- 사업내용 :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에게 매월 일정 금액(1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 [월 15만원 책정 논거] : $A/B/12(\text{개월}) = 148,163\text{원}$
- 읍 지역 가구와 면 지역 가구 소득 격차(4,196,000원) [A]
 - 농어촌 평균 가구원수(2.36명) [B]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방법

- 비교지역 :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만 진행
 - 소액의 조사 사례비 지급(3만원, 기본소득 미지급)
- ※ 안성시 삼죽면
-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 사업기간 : 도시민의 이주까지 고려하여 5년간 진행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현황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절차 >

기본계획 수립 (2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21.2~하반기)	실험마을 및 평가업체 선정 (21.하반기)	본실험 실시		
			사전조사 (21.하반기)	기본소득지급 (21.하반기)	중간조사 및 사후조사 (21.하반기 ~23.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지역 선정기준 ▪ 지급금액 ▪ 실험지역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 지급 근거 조례 마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마을 및 비교 마을 신청 접수 및 선정 ▪ 정책효과 분석 용역 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사 및 실험 지역 산업 체 조사 ▪ 실험지역 주민 사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지역 기본소득 지급 ▪ 주민 설문 조사 및 산업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실험결과 평가

자료 : 경기도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 첫째, 정형 형태가 아닌 현실에 맞게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
- 대표 사례 :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실험형/미실시)
⇒ 기본소득의 구성원칙을 다 준수하는 것 아님

기본소득의 5가지 구성원칙 (BIEN 채택)

특징	내용	변형 (경기도형)
보편성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 재산 유무 안 따짐	범주보편성 일정 대상(예, 24세 또는 농민)으로 한정
무조건성	노동 여부 안 따짐	
개별성	개개인에게 지급	
정기성	일정 주기로 지급	(準) 정기성 [재난기본소득] 2회 지급 (불규칙) [청년기본소득] 1년 지급(분할: 규칙 또는 불규칙)
현금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準) 현금성 [재난, 청년, 농민] 지역화폐 지급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변형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형 기본소득	변형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구 성 요 소	보편성	범주보편성(만24세 대상)	보편성(도민 전체)	범주보편성(농민)
		보편성(자산심사 없음)	보편성(자산심사 없음)	非보편성 (일정소득 이상 배제)
	무조건성	무조건성 (노동조건 부여 안함)	무조건성 (노동조건 부여 안함)	무조건성 (노동조건 부여 안함)
	개별성	개별성 (개인에게 지급)	개별성 (개인에게 지급)	개별성 (개인에게 지급)
	정기성	준(準)주기성 (1년 4회 지급, 1년 지급)	비(非)정기성 (비주기적 2회 지급)	정기성 (매월 지급, 매년 지급)
	현금성	준(準)현금성 (지역화폐 지급)	준(準)현금성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지급)	준(準)현금성 (지역화폐 지급)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 둘째, 현실적 이행전략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정형 형태의 기본소득 실현은 이상과 이념적 지향에 더 가까움
⇒ 기본소득 구성원칙의 일부를 훼손하면서도 현실 실현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
- ※ 야니크 반더보르트(벨기에 생루이대 교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현실적 이행전략으로 유의함 강조(2019.12 및 최근 논문에서 인용)
- ※ 변형 기본소득이 긴급한 특수상황에 대응력 높음이 입증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회성(on-off) 한시적(지역화폐 사용기한 3개월) 지급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 셋째, 로컬 기본소득의 선도적 사례
 - (청년, 재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실험)은 그 어느 곳도 아닌 경기도가 실행
- ※ 로컬 기본소득은 내셔널 기본소득과 달리 그 나름의 장점이 존재
 - 로컬의 특성, 수요 등을 반영하는 보다 필드 친화적 설계 가능
(필드 친화적 = 다양한 형태의 변형 기본소득 적용을 의미)
 - 지방 인구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
 - 지역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의의 지님
 - 지자체 소유 공공자산(public property)의 수익으로 로컬 기본소득 재원 조달 가능
: 공공자산이 공유부(common property) 성격을 지닐 수 있음
⇒ 로컬 기본소득은 내셔널 기본소득에 대한 보완적 제도로 유지, 강화 필요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 넷째, 기본소득 구성요건 중 현금성을 지역화폐(로컬 화폐)로 달성
- 정책의 경제사회적 의의를 확대
 - => ① 영세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의 활성화
 - ② 지역공동체 의식, 가치 함양
 - ③ 소비자-판매자 간 정치적 성격의 연대 강화
- ※ 로컬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용처를 지역 내로 한정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가능
- 지역내 연대경제 효과 증대와 소비자 효용의 감소를 Trade-off 하는 정책 구현
 - => 지역화폐 사용에 제한을 두어 소비자의 행위에 변화를 유도 (불편을 의도적으로 야기)
 - ①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점포에만 사용 가능
 - ② 경기도 전역이 아닌 경기도 내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 ③ 사용기한 제한 (1년 또는 3년 등)
 - ④ 업종 제한 (유흥업소 등)

3.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성 평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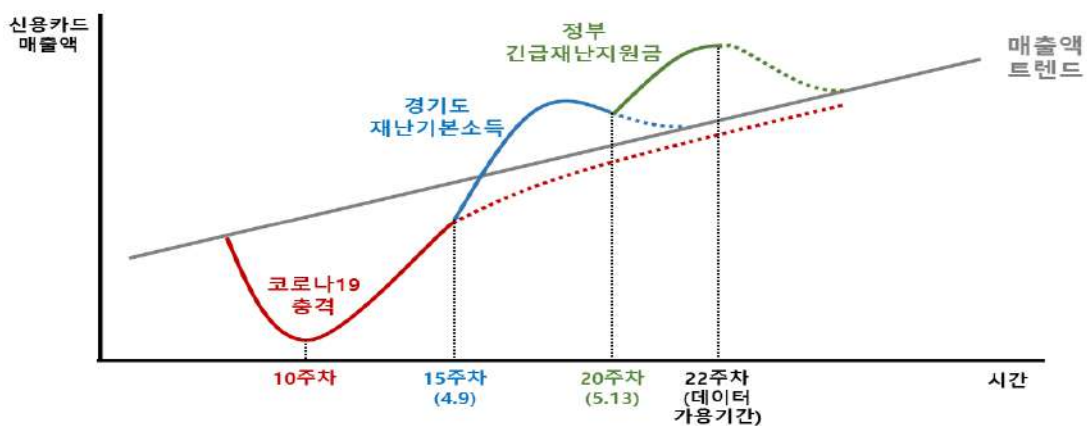
- 다섯째,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능성 제시
- 경기 데이터 배당 (공공데이터 매각수익 배당)
 - => 지자체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유상매각을 통한 수익의 활용
 - 로컬 기본소득의 재원화
 - 경기도민 배당(기본소득 지급) 실시
 - => 데이터 경제의 발전 추세에 따라 배당 액수가 점차 증가 예상
- ※ 빅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중앙정부에서 도입하는 것이 마땅 (지자체는 과세권이 없음)
- 경기 데이터 배당은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모델에 해당
 - => 경기 데이터 배당은 모든 도민에게 열려 있음 (모든 도민이 지역화폐 사용 가능)
- ※ 단, 현재는 제한된 지역화폐 사용자에게만 지급(기본소득 기준 중 무조건성과 보편성 위배)
 - => 경기 데이터 배당의 수익배분은 기본소득 기준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모두 충족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첫째,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의 효과

(소상공인 매출효과)_ BC 카드 매출액 자료 이용



자료: 경기연구원, "신용카드(BC)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2020.5.27.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첫째,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의 효과

OLS 회귀분석 결과

- 지역화폐 가맹점 및 비가맹점 합산 전체 신용카드(BC) 매출액 증가율이 약 **8.4%p 상승**($p < 0.0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제외시 **6.0%p 상승**]

이중차분분석 결과

- 지역화폐 비가맹점 대비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약 **32.0%p 높음** ($p < 0.0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제외시 **30.3%p 높음**]

둘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효과

설문조사(5,160가구 샘플) 및 신용카드 자료('19. 1~4, '20. 1~12, '21. 1~3) 사용 이중차분분석 결과

- 소비촉진효과 : 사이로 추정 [설문조사, 신용카드 자료]
- 매출증진효과 : 매출의 약 증가 추정 [신용카드 자료]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셋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2019년 사업 기준)

양적 조사 패널 구성

실험집단 (경기도 청년 24세)

- 사전조사 응답자 63,300명 (1분기 57,540명 + 2분기 5,760명)
- 사후조사 응답자 (1차) 32,687명
(2차) 11,335명

비교집단 (경기도 외 지역 청년 24세)

- 사전조사 응답자 1,300명
- 사후조사 응답자 (1차) 900명
(2차) 800명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양적분석 결과(2019년 사업 기준)

● 이중차분분석(DID) 결과 정리

통계적 유의성	정(+) ¹ 의 영향	부(-) ² 의 영향
유의	삶의 만족도, 일 가치, 행복함, 건강수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신뢰, 젠더인식, 평등사회인식, 꿈-자본(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노동시간, 식사 시간 여유, 가사활동시간 여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여유,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여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여유, 사회적활동 및 봉사시간 여유, 자기계발/교육비 지출액	우울함, 근심, 사회문제의 국가책임, 식료품지출액, 주거비지출액,
비유의	자기결정권, 타인에 대한 영향력, 보편복지 인식, 증세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구직활동시간, 직업훈련시간, 수면시간 여유, 여가활동비 지출액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넷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2020년 사업 기준)

양적 조사 패널 구성

구분	조사시간	설명	사례수	
실험 집단	사전조사	2020년 4월~7월	2020년 1분기 신청자	40,959명
	사후조사	2021년 4월~6월	사전조사 응답자 중 4회 수령자	14,083명
비교 집단	사전조사	2020년 4월~7월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 만24세 청년 (20년 4월 기준)	5,216명
			[신규] 경기도 거주 만21~23세 청년 (20년 4월 기준)	5,214명
			[신규] 경기도 거주 만26~28세 청년 (20년 4월 기준)	5,166명
	사후조사	2021년 4월~6월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 만24세 청년 (20년 4월 기준)	2,369명
			[신규] 경기도 거주 만21~23세 청년 (20년 4월 기준)	2,368명
			[신규] 경기도 거주 만26~28세 청년 (20년 4월 기준)	2,540명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2020년 사업 기준)

● 이종차분분석(DID) 결과

(a) 경기도 이외 거주 24세 청년과의 비교

유의성	정(+) ⁶ 의 영향	부(-)의 영향
유의함	행복도, 만족도, 가치, 건강생활, 건강수준, 식생활, 꿈-자본, 상상력, 낙관성, 회복탄력성	사회적 활동 및 봉사시간 부족 및 여유
유의하지 않음	행복함, 우울함, 근심, 정신건강, 운동빈도, 신뢰, 젠더 인식,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평등사회 인식, 사회문제의 국가 책임, 보편복지, 증세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희망, 노동시간, 구직활동시간, 직업훈련시간, 수면시간 부족 및 여유, 식사시간 부족 및 여유, 가사활동시간 부족 및 여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및 여유,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부족 및 여유,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부족 및 여유, 식료품비 지출액, 주거비 지출액, 자기계발/교육비 지출액, 여가활동비 지출액	

(b) 경기도 거주 21~23세 청년과의 비교

유의성	정(+) ⁶ 의 영향	부(-)의 영향
유의함	행복도, 건강생활, 증세에 대한 태도	젠더 인식, 구직활동시간
유의하지 않음	신뢰,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평등사회 인식, 사회문제의 국가 책임, 보편복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꿈-자본, 노동시간, 직업훈련시간, 식료품비 지출액, 주거비 지출액, 자기계발/교육비 지출액, 여가활동비 지출액	

GRI 경기연구원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2020년 사업 기준)

● 이종차분분석(DID) 결과

(c) 경기도 거주 26~28세 청년과의 비교

유의성	정(+) ⁶ 의 영향	부(-)의 영향
유의함	행복도, 건강생활, 자기계발/교육비 지출액, 증세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꿈-자본, 자기계발/교육비 지출액	젠더 인식
유의하지 않음	신뢰,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평등사회 인식, 사회문제의 국가 책임, 보편복지, 노동시간, 구직활동시간, 직업훈련시간, 식료품비 지출액, 주거비 지출액, 여가활동비 지출액	

4.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효과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2020년 사업 기준)

- 횡단면(Cross-Section) 분석 결과

<경기도 거주 비교집단 청년들과의 사후시기 비교 결과>

정(+)이며 유의	부(-)이며 유의	유의하지 않음	비교할 수 없음
행복도, 건강생활, 신뢰, 젠더인식,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평등사회 인식, 보편복지, 증세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꿈-자본, 자기계발비/교육비		구직활동시간(26~28세와의 비교에서는 양(+)으로 유의), 사회적 활동 및 봉사시간(21~23세와 비교는 음(-)으로 유의)	사회문제의 국가 책임, 노동시간, 직업훈련시간, 수면시간, 식사시간, 가사활동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식료품비 지출액, 주거비, 여가활동비

주 : 사전시기에 실험집단(24세)이 경기도 여타 연령대 비교집단에 비하여 일괄적으로 더 높거나 더 낮은 경우에만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음' 범주에 포함시킴.

“ 감사합니다. ”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부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발표2

“국제 및 국내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논의 현황”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도입현황

2022년 4월 20일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목 차

기본소득의 두 가지 정의와 원칙	1
지방정부기본소득의 분류	5
국내사례	7
해외사례	17
나가며	23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정의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두 가지 정의와 원칙

| 기본소득의 원칙 - BIEN의 정의에 의함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자산심사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	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활동 요구하지 않음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	한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속적 지급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고자 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따라 '누구에게나' 지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제나 요구사항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개인에게 지급	기본소득은 출발선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자유의 기회와 실현수단을 제공하고자 함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지출이 가능하도록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

| 기본소득자구네트워크(BIEN)의 정의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두 가지 정의

| 기본소득의 원칙 - BIKN의 정의에 의함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p>특정 공동체 (주로 지역) 누구에게나 지급</p>	<p>노동, 구직활동 자산조사 등 일체의 조건 없음</p>	<p>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p>	<p>한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속적 지급</p>	<p>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p>
<p>한 지역내의 모든 구성에게 지급되느냐 (보편성 충족) 일부에게만 지급되느냐 (보편성 미충족)</p>	<p>수급을 대가로 어떠한 조건도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p>	<p>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개인에게 지급</p>	<p>기본소득은 출발선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자유의 기회와 실현수단을 제공하고자 함</p>	<p>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지출이 가능하도록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p>

| 재원에 따른 분류

- 지방세: 기본소득 정책사례의 대부분을 차지.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청년기본소득 등
- 지자체 소유 공공자산 수익
 - 알래스카 영구기금, 이스턴 밴드 오브 체로키 인디언 배당 등
- 지자체 투자 공유지분 수익
 - 정선군민 기본소득 등

| 지급 대상(범위)에 따른 분류

- 전주민: 정선군민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알래스카 영구기금, 체로키 배당 등
- 범주형
 - 인구(연령) 범주: 아동, 청년, 장년, 노인 등
 - 직업 범주: 농어민,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 지역 범주형?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연천군 기본소득, 청산면 기본소득?)

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사업(1)

- 분 류: 지방세 기반의 인구 범주형
- 지급대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 지급신청: 학교별 접수 혹은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 지급금액
 - 13~15세(중학생에 해당): 매월 5만원
 - 16~18세(고등학생에 해당): 매월 7만원

국내 사례

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사업(2)

- 지급방법: 바우처 카드
- 지급현황: 전체 대상의 98%인 2,500여명의 청소년 수급
- 특징:
 - 사용처 제한: 고성군 관내 862개 가맹점(교육, 문화, 진로, 체험, 건강 등)
 - 영화관람 가능: 학생들과 학부모 의견 반영
 - 주된 사용처: 서점과 문구점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 분 류: 지방세 기반의 인구 범주형
- 지급대상: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10~12세 어린이(초등 4~6학년)
- 지급금액: 매월 2만원
- 지급방법: 대덕 e로움 지역화폐
- 정책목적: 자녀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들의 소비권리 보장

농(어)민 수당(2021년 12월말 현재)

자치 단체명	사업명	지급대상	지급액 (매칭비율)	도입 (지급)	기타
강원도	농어 업인 수당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로 등 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도내 농지를 1650㎡이 상 20만㎡이하로 경작하는 농가	연 70만원 (도6, 시군4)	2021년 (가구)	강원상품권 6 시군상품권 4
경기도	농민 기본 소득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 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 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 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	연 60만원 (도5, 시군5)	2021년 (개인)	소멸시한 3개월 지역화폐

농(어)민 수당(2021년 12월말 현재)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경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배우자에 한해 의망여부에 따라 등록)	연 30만원 (도4, 시군6)	2022년 (가구)	공동경영주도 지급 받음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농어민수당 신청 년도의 1년 전부터 경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연 60만원 (도4, 시군6)	2022년 (가구)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	농어업 경영정보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과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	연 60만원 (도4, 시군6)	2020년 (가구)	개인별 지급 개정 추진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 수당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전라북도 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양봉농가, 어민포함(2021년 추가)	연 60만원 (도4, 시군6)	2020년 (가구)	

농(어)민 수당(2021년 12월말 현재)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1년 전부터 계속 충남에 거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연 80만원 (도4, 시군6)	2020년 (가구)	전국 최고액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 수당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민.	연 50만원 (도4, 시군6)	2022년 (가구)	
제주도	농민 수당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연 40만원(?) (도10?)	2022년 (농가)	지급액 미정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 자금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봉화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가족, 임산물 포함)	연 80만원 (군10)	2019년 (농가)	30억원 (완료)

정선군민 기본소득 설계(안)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 군민
- 지원기준: 주민당 4분기당 5만원, 혹은 2분기당 10만원(총 연간 20만원)
- 소요예산: 74억원(37,000명 X 20만원)
- 재 원: 정선군 소유 강원랜드 주식 배당(약 100억원)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
- 지급수단: 정선군 지역화폐(카드)
- 기 타: 사용기간을 제한(예: 3개월, 혹은 6개월)하여 소비효과 진작 필요성

대안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국내 사례 - 정선군민 기본소득

남은 문제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통과가 관건
 - 왜 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가? : 필요성, 정당성 입증
 - 예산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예산 조정은 타당성을 지니는가? : 강원랜드 배당금은 그동안 정선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왔음. 즉 정선군의 기존 예산으로 사용되어 왔음. 그런데 그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 처리는 타당성을 지니는가?
 - 제도 도입 효과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 타 지자체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혹시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숨은 고려사항)

대안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충남 보령 장고도

- 마을의 공동재산인 해삼과 전복 양식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배당
- 배당액은 2019년 현재 가구당 1,100만원 수준
- 20년 이상 거주 조건과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당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완전히 갖춘 제도는 아님
- 그러나 '경쟁' 일변도인 오늘날 '공동체정신'과 '공생'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기본소득제도의 목적과 합치하는 정신을 현실에 구현

| 충남 태안 만수동 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 마을, 전북 정읍 송죽 마을

- 장고도 처럼 일정 거주요건을 지닌 모든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은 아님
- 노년층을 대상으로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수익을 마을연금 형태로 지급
- 마을마다 지급액, 지급대상, 자원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마을의 공동재산을 마을의 구성원(고령자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님

|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1)

- **재원: 석유 채굴권 판매수익**
 - 1976년 지속 불가능한 자원 (non-sustainable resource)인 석유 관련 공공 수익을 기반으로 알래스카 영구기금 설립
 - 설립 3년 만에(1979년) 국부펀드 법인으로 재탄생
- **지급대상: 1년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 배당 지급 직전년도 중대범죄 유죄판결로 복역중인 자 제외
 - 영주권자, 난민 등 비서민에게도 광범위하게 지급

|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2)

- **배당방법: 펀드 운영수익 배당**
 - 직전 5년간 펀드운영수익의 절반 지급이 기준
 - 대체로 매년 10월 지급
 - 수표 또는 계좌입금(약 96%)
- **배당액: 운영실적에 따라 유동적**
 - 최저액: 1984년 331달러, 최고액: 2,072달러
 - 빈곤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성 만족 못함

|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3)

- 효과 및 특징:
 - 배당 받은 달에 소비 늘며, 초과소비효과는 대체로 3개월가량 지속
 - 화장품, 세제, 식품, 연료, 옷, 신발 등에 대한 소비 증가
 - 영유아 건강, 신생아 몸무게 상승, 3세미만 아동 비만을 저하
 - 농촌지역 원주민 빈곤율 저하, 노인층에서 특히 뚜렷함
 - 알래스카주의 지니계수는 두번째로 낮고(2018) 하위 99% 평균소득 대비 상위 1%

의 평균소득은 가장 낮음(2013)

| 노스캐롤라이나 이스턴 밴드 오브 체로키 카지노배당(1)

- 재원: 1997년 설립한 해라스 체로키 카지노 리조트 운영수익 일부
- 지급대상: 부족 구성원 모두
- 지급방법 및 배당액
 - 성인: 6개월마다 부족 모든 성인 구성원에게 고용상의 지위나 소득, 다른 가구 특징과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동등분배
 - 인당 595달러(1996), 6천달러(2001), 9천달러(2006), 1만2천달러(2012)
 - 아동: 만 18세 될 때까지 배당금을 신탁기금에 적립

| 노스캐롤라이나 이스턴 밴드 오브 체로키 카지노배당(2)

- 효과 및 특징:
 - 배당은 고용, 노동시간, 노동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소년들의 교육, 범죄, 주민 건강에 긍정적 영향
 - 아동 학교 출석률 상승, 교육기간 길어짐, 학업수행 결과도 좋아짐
 - 아동 범죄율, 청년들의 마약거래, 성인 범죄율 모두 감소
 - 주민 정신건강 향상, 알코올이나 대마초 사용 및 중독 감소
 - 배당금 수혜기간 길수록 성인 되었을 때 정신장애 가능성 감소

| 중국 마카오 현금배당계획(Wealth Partaking Scheme)

- 재원: 마카오 정부의 조세수익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모든 거주자 대상이나 지급액 차등 있음
 - 2017년 기준 영구거주자/거주증 소지자(638,600명)는 연 9천 파타카(1,300미달러), 비영구 거주자(62,000명) 연 5천4백파타카(670미달러)
- 지급목적
 - 분배정의 실현
 -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 일자리 보호

| 공유부 배당 취지 살리고, 공유지 발굴 및 배당 지원 필요

- 국내의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제도는 정선군민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첫 사례가 될 것임
- 지역 별로 정선과 같은 사례 발굴 노력 및 지원되어야
- 공유지 배당에 근접한 사례로서 충남 보령 장고도의 해산물 수입 배당과 같은 제도의 발굴 및 독려 필요
 - 산림 등에 대한 지자체의 감벌, 임로 개설 지원, 문화재 보존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지 배당 방법 모색해야

2부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기조발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대선 기간 기본소득 운동의 성과와 과제

(20대 대선 기간 동안 기본사회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 세 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1. 들어가며

대한민국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큰 나라가 있을까? 기본소득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고, 경기도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지속되어 왔으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체험한 국민들이 중심이 된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펼쳐지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공론화 작업, 국민 운동 등은 민간, 학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프로세스지만, 제도로서의 실현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실현의 키는 정치인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면, 그 실현은 실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기본소득 실현 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조차도 없거나, 심지어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숫자나,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실험 횟수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는 매우 좋은 기회가 놓여 있다. 대선에서는 승리하지 못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이전보다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고, 기본소득 실천가들에게 선거라는 공간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이제는 이 여세를 몰아 6월의 지방 선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다. 금번 대선 기간 동안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식 선거 조직이었던 기본사회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지방 선거 활용 극대화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기본사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의 직속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 캠프가 꾸려졌지만, 1차로 발표된 조직 내에는 이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뒷받침해줄 조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한 결과였다. 이에 후보자가 직접 나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우원식 의원과 강남훈 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시민 단체로서 공식적인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들을 담당하였다. 이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을기본권 등을 추진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하는 전국의 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은 기본소득이었다.

공식 선거 기간 동안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어떻게 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선한 영향력 확산을 통한 전국민적인 관심 유도’라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였다.

-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단’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 구성
- 전국 광역 단위의 ‘헌혈로 함께 하는 보편적 나눔 캠페인’ 진행
- 민주당의 클린 선거 운동을 위한 ‘유세 후 유세장 인근 줍깅 활동’
- 각 지역별 기본소득 공약 홍보 활동
- 찾아가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강연회
- 농어촌 지역에서의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기본사회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다수의 성과를 남겼다. 헌혈 캠페인과 줍깅 활동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책단과 자문단을 통한 심도 있는 공약과 정책들도 성과물들 중의 하나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도 기본소득이 시급한 농어촌 지역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인 것은 고전적인 기본소득의 정의를 넘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힘과 보수 언론들이 주도한 대장동 사건 등의 ‘네거티브 전략’과 ‘프레임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이대남’ 등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전략상 고려, 그리고, 민주당 내 기본소득 반대 세력 등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등의 이유로 선거 막판까지 기본소득을 선거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한 점은 선거 조직으로서의 한계점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선거조직으로서 기본사회위원회의 경험은 지방 선거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는 정치공동행동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고 판단된다.

첫째, 활동가들이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 공식적인 선거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효과

둘째, 정치 공동 행동과 선거 캠프와의 관계 설정 및 토론회 등의 전략적 활동 전개

셋째, 네거티브와 프레임 싸움에 대한 대처

넷째, 기본소득 반대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극복 방안

다섯째, 지선에서의 경험을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 추진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섯째, 대선 기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농어촌 지역에서의 정치 행동 전략 마련

기본소득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다. 6월 지방 선거라는 기회를

잘 살려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부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기조발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의미

: 기본소득 의제의 관점에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가 이성의 패배인가?

브레히트는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패배는 이성의 패배인가? 2022년 3월 10일의 결과를, 특히 기본소득 의제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대위 명제 같은 식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로 느꼈지만, 3월 10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최초로 보편적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기 때문이며, 2016년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 및 대선에서의 인물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질 수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의제가 이렇게까지 부상하게 된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집권 여당 후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따지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 것이며, 이 자리는 이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패배했다는 것만 받아들여야 하자. 다만 기본소득 의제와 관련해서 미리 두 가지는 말해두어야겠다. 하나는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기본소득 의제가 후퇴하거나 흐릿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진보적인 혹은 전환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신자유주의적 욕망의 주체성과는 다른 연대와 공동의 주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이성적인 사람들은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건 아마 굴복하지 않는 태도일 것이다. 이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패배를 철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이성의 승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궤적 혹은 기본소득의 모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떻게 되었

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 의제는 어떻게 진전했는가?

바이런이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유명해졌다”라고 말했다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언자는 과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한 것도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이 의제의

운명도 절반쯤은 거기에 좌우될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한 데 출발점은 잿더미 속에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전환적인 의제를 제출하려고 했던 정치적, 사회적 개인과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그런 성격이 있는 의제라는 것을 알아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어의 이론적 기반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한편, 현실적, 정치적, 조직적 계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실현을 위한 정치적 통로를 개척하려고 했다. 다음으로 일부 지식인 집단 및 시민사회 운동을 제외하곤 한국의 어떤 의미있는 정치 세력도 전환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는 탄압받는 야당이었다고 이제는 한국 사회의 주류와 겹쳐 있는 민주당 계열은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를 자신들이 계승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탄압을 견뎌내고 주요한 개혁 집단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국제적으로도 찬사를 받던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주변화된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기술 변화 등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는 언젠든 계기만 있으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 시간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진정성 있고 개혁적인 인격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며,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한 세 번째 이유일 것이다.

끝으로 속도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기반 그리고 이를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 길게는 무상 급식부터 짧게는 2016년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까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 의제의 부상, 수용, 반대라는 양상의 조건을 이루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한 이유를 위에서 말한 것에서 찾는 것은 거꾸로 기본소득 의제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그만큼 단단하지도 넓지도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관점에서 자기실현을 위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실현의 문턱을 넘는 통로로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같은 시민적 조직의 출현은 이런 정치 과정의 효과이자 또 다른 추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지난 대

통령 선거는 기본소득 정치의 포퓰리즘적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밀물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오시비엔침) 이후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홀로코스트에 대한 바우만의 해석을 따라 홀로코스트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대성의 핵심적 양상들이

종합돼 나타난 필연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사태에 눈을 감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야만이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진부할지 모르지만 산문, 즉 아도르노가 말한 에세

(essai)를 쓰는 일 아니 행하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가 기본소득 정치의 포퓰리즘적 계기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든 결과는 그 계기의 해체를 의미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고조되었던 기본소득 의제의 물결이 잦아들고 갯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말한 기본소득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겨냥한 것이었는가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고, 혹은 남겨지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대홍수 이후의 백지상태나 거대한 폭발 직후의 진공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무엇이고, 무엇을 겨냥했는가를 말해보자. 어떤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로 지급하는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경제적 기반의 일부를 마련해 주어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개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런 개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지향 속에 살아갈 것인가?☒

다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흔적들 혹은 남겨야 하는 흔적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두 가지 정책, 제도의 문턱을 넘으려 하는 정책들, 이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이 경험에 대한 이론과 담론,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조명탄처럼 켜졌던 기본소득이라는 기표 등일 것이다.

이런 흔적 속에 맞이하는 지방선거는 군사적 비유를 하자면 (군사적 비유이기에 입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학적이지도 않다) 1950년 추운 겨울에 벌어진 장진호 전투와 비슷할 것이다. 겉으로는 드러난 것은 후퇴이지만, 적에게 큰 타격을 주어 전체 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운 우리는 누구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전설을 남긴 전투. 이때 중요한 것은 조직적 퇴각을 위해 누군가는 버텨야 하고, 누군가는 또 전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장소가 우리가 후퇴하는 지점일 것이다. 이 지점이 또 다른 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어떤 무기를 들고 갈 것인가?

2부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기조발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2부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기조발제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대선을 평가해야 한다

지난 대선은 의외 기본소득이 핵심쟁점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후퇴하였다. 민주당 내 기본사회위원회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전체 기본소득 진영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힘을 받으려면 바깥에서 시끌시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의미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하고 수시로 소통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선을 기본소득 생태계를 풍성케 하는 지점으로 활용하자

대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선에 임하자. 따로 분리되어 움직이지 말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공동의 전략과 전술로 임하자. 그런의미에서 이 정치공동행동이 중요하다.

기본소득 후보 선포식을 갖자

다양한 모양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 이들의 손을 잡고,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동의 후보라는 생각을 갖고 선포식을 중앙/광역에서 진행하자.

농민수당 확대/발전시켜 농민기본소득 실현하자

지난 대선때 읍단위 이상 농민들을 배제 하고농촌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 힘이 모이지 못했다. 이후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이것을 힘있게 선전/홍보도 못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서는 농민수당 진영들과 전략적 동맹을 맺으려 한다. 농민의 길과 정책협약을 하고, 각 후보들과 손을 잡으려 한다. 광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민수당은 농가수당이며, 액수도 너무 적다. 이런 문제점으로 이미 광역마다 조례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들과 힘을 합쳐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기보소득

과

지방자치